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27
----------	------

발의연월일 : 2024. 10. 31.

발 의 자 : 민형배 · 이수진 · 김성환
곽상언 · 김용민 · 김문수
한민수 · 이기현 · 이정문
권향엽 · 윤준병 의원
(11인)

제안이유

주민소환 투표 절차 및 요건 간소화로 주민참여율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이 높아 실제 주민투표 및 소환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지만, 주민소환투표권은 여전히 19세 이상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절차적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주민소환투표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

고자 합니다. 주민소환제도 활성화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 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안 제3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면서, 그 비율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 지방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로 변경함(안 제7조).
- 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을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함(안 제8조).
- 라.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등의 서명요청 활동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 마.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안 제11조의2 신설).
- 바. 거짓으로 서명요청권 위임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5호 신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의”를 “18세 이상으로서 제4조제1항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을 “제3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로 한다.

⑥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제2호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을 “소환청구인서명부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서명요청 활동”을 “서명요청활동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을 “서명을 요청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하 “서명요청활동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등을”로, “서명요청 활동에”를 “서명

요청활동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명을 요청할”을 “서명요청활동등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명요청 활동”을 “서명요청활동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주민등록 등 전산자료의 제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전단 중 “제61조”를 “제59조(제2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제61조”로, “제82조의4 및 제82조의6”을 “제82조의4 및 제82조의7”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을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로 한다.

- ①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할 수 없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8조 중 “제85조제1항”을 “제8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서명요청 활동”을 “서명요청활동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을 “제20조제1항에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5. 거짓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

제31조제1항 중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를 “제85조제3항 및 제4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서명요청활동등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등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등에 관여한 자

1의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하게 한 자

제35조제3항제1호 중 “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을 “사전투표사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제261조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권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단서 신설>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 18세 <u>이상으로서 제4조제1항의----- ----- ----- ----- -----.</u>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 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 재된 자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 표”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 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 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p>② (생 략)</p> <p>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u>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u>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u>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p>	<p><u>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 ----- --<u>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u>은----- -----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u>----- ----- -----<u>. 이 경우 그 비율은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u></p>
---	---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
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
의 10 이상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
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
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
00분의 15 이상

3.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
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
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
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
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
상

② ~ ⑤ (생략)

<신설>

의 100분의 15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주
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
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
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
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
서명부”라 한다)에 성명·주소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
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생략)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
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생략)

제9조(서명요청 활동) ① 주민소
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
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와 서
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
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명
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
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
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
부”라 한다)를 사용하여 주민
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 생년월일 및 서명일자를 기
재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
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
기간) -----

-----.

1. (현행과 같음)

2. -----
-----6개월-----

3. (현행과 같음)

제9조(서명요청 활동) ① -----

-----소환청구
인서명부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략)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1. ~ 5. (생략)

③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검인되지 아니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서명요청 활동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명을 요청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하 “서명요청 활동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등을-----
서명요청 활동등에-----.

1. ~ 5. (현행과 같음)

③ -----
-----서명요청 활동등을 할-----
-----.

④ -----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제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제63조(선거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69조·제79조·제82조

서명요청활동등-----.

⑤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의2(주민등록 등 전산자료의 제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제59조(제2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제61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 제82조의4 및 제8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 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은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제20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
기간 중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
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
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

터넷 광고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한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생략)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3. ~ 6. (생략)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3. ~ 6. (현행과 같음)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②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 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을 말한다) 및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지방의회의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 한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부의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삭 제>

[illegible]

<p>제28조(벌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략)</p> <p>4.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u>서명요청</u>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p> <p><신설></p>	<p>단 삭제></p> <p>제28조(벌칙) ----- ----- -----제85조제1항 및 제2항----- ----- ----- -----.</p> <p>제30조(벌칙)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서명요청</u> 활동등----- ----- ----- ----- ----- ----- ----- ----- -----</p> <p>5. 거짓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u>서명요청권</u> 위임대상자의 인</p>
---	---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1. <u>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u></p> <p>2. <u>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u></p> <p>제31조(벌칙) ① <u>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② <u>제20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u></p>	<p><u>적사항 등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u></p> <p>② <u>제20조제1항에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는-----</u> -----.</p> <p><삭 제></p> <p><삭 제></p> <p>제31조(벌칙) ① ----- ----- -----<u>제85조제3항 및 제4항의</u>----- ----- -----.</p> <p><삭 제></p>
--	--

<p><u>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u>서명요청을 한 자</u></p> <p><u><신 설></u></p> <p>2. 3. (생략)</p> <p>제35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① . 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주민소환투표사무원·<u>부재자</u> <u>주민소환투표사무원</u>·<u>개표사</u> 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p> <p>2. ~ 4. (생략)</p>	<p>제32조(벌칙) ----- ----- ----- -----.</p> <p>1.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를 위반하여 <u>서명요청활동등</u> <u>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등을</u> <u>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u> <u>활동등에 관여한 자</u></p> <p>1의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u>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u> <u>하거나 하게 한 자</u></p> <p>2. 3. (현행과 같음)</p> <p>제35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u>사전투</u> <u>표사무원</u>----- ----- ----- -----</p> <p>2. ~ 4. (현행과 같음)</p>
---	---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u>제261조제7항 및 제8항</u>을 준용한다.</p>	<p>④ ----- ----- ----- ---<u>제261조제10항 및 제11항</u>----- -----.</p>
--	---